

북한 지역건축탐방을 읽고서

Reading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of North Korea'

김학철 / 한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AIA, NCARB

by Kim Hak-Chul

2회에 걸쳐 연재된 건축사지 「테마기획/지역건축탐방-북한」편은 북한지역 건축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건축을 하나의 '지역문화' (Regional Culture)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건축에 관련된 북한 간행물이 극히 적은데다 일반인의 접근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많은 자료가 탈북자들에 의존해야했던 현실이 좀 안타까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4대합의 사항의 6.15선언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볼 때 건축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긴급한 현실적 요구가 있으며 따라서 이 연재가 준 의미는 크다. 더구나 북한건축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논의가 남쪽에서 한번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연재가 주는 비중은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대비 할 것인가? 이 연재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필자주>

인격의 만남

통일대비의 전제조건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에 주어진 현실 상황과 여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세계인의 관점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북한의 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마치 남쪽의 것들을 남쪽의 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에 통일의 문제를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한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체제적인 변화가 하루 속히 와야한다는 긴박감을 준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커녕 오히려 장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북한의 주어진 체제를 인정함은 물론 더 나가서 체제유지에 남쪽이 힘을 담아주어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해야된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남쪽의 경제원조 내지 협조는 경제안정보다 정치안정에 더 큰 의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역설적인 논리 같지만 평화통일의 기반이 양측의 정치안정에 달려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대 원칙 때문이다. 주체라는 깃발아래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북한경제를 파경에 빠뜨렸으며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정치를 감행했고 하고있다. 김일성이 6.25동란을 통해서 저지른 죄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해도 용서의 여지를 찾지 못한다.

이 동란을 겪은 세대면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가슴에 맺힌 한을 씻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이 한 많은 가슴만을 안고 국토가 분단된 채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옛날의 안경을 벗어야한다. 현실을 현실의 안경을 통해서 봐야한다. 그리고 나면 많은 긍정적인 것이 보인다. 이렇게 될 때에 대립되어온 이데올로기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의 실마리도 화해라는 안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리는 남쪽의 건축계가

통일을 대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태철학

북한의 건축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효율적이며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공유제도는 '생태마을' 만들어 나가기에 오히려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끝짜가 첫째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동안 대립관계에서 서로 부정적인 면만 들어내오다가 안경을 바꾸니 긍정적인 면이 보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 동안 펼쳐온 '도농균형' 개발정책과 '직주근접' 체계 등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한다는 생태학적인 원리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남쪽에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특히 건축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시된 전국토 도시개발 현상을 보면 첫째가 끝짜된 꼴이다. 남쪽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에서 생태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요즘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북쪽에는 환경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해가 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무절제한 공장운영에서 오는 수질 및 대기오염, 다락발 개간과 새땅찾기 운동에서 오는 자연훼손, 이런 결과에서 오는 갖가지 공해병 문제가 크리라고 본다. 양쪽이 나름대로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나 도시 및 건축에 관한 한 북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논의할 때에 잘못된 점만 꼬집는 행위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놓고 볼 때에 아무런 도움이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평면적인 위치에서 보는 2차원적인 관점이 아닌, 양쪽과 세계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3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북한을 그리고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눈 높이를 높이지는 것이다. '도토리 키 재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이 나름대로의 체제형성과 이의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남북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주어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북한

의 건축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 후에 올 변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후에도 어느 기간까지는 남북한이 각기 현 체제를 유지하는, 즉 남쪽의 토지사소유제와 북쪽의 토지공소유제를 동시에 인정하는 체제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남쪽이 갖고있는 토지사유화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에 북쪽이 갖고있는 토지공유화제도를 개발과 생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의 주인인 국가가 이의 공권력을 이 방향으로 동원할 때 그 가능성은 크다.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있는 토지사소유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남쪽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사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다. 한가지 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두 가지 체제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동구의 사회주의권이 경험한 체제전환, 통일독일이 경험한 체제통합, 그리고 중국이 겪은 체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토지공유제도에서 즉각적인 사유화로의 전환은 많은 부작용을 반한다.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를 장기로 공공 임대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가는 토지소유권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한편 그 개발이 생태 보존(保存) 및 보전(保展)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원리는 생태철학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회의 체제를 자기 쪽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보전(保展)적 상생(相生)원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절충한 소위 복지국가 혹은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제3의 수정자본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것이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지 않는 탈 근대적 문명전환을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보전(保展)개념을 확립함을 말한다.